

社 說

독재와 민주주의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 이희창 총리 해임을 바라보며

지난 21일, 이희창 총리가 해임되었다. 그 사정을 알아 보면, '법' 대로 '조선대로' 내각을 운영하던 이 전총리가 김영삼 대통령과 '불화'를 일으켜, 김 대통령에 '대' '불화'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대(代)'를 찾았다는 것이다.

일말 듣기에 알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어불성설은 '대'를 지기도 전에 이영덕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마담'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예측하기 힘든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전총리 해임과 더불어 일어나는 사태의 평가는 국민들께 부탁하면 한마디로 조소부터 보낼 것이다.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여당은 본체를 축소하듯 새총리 인준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야당은 지면준을 끝내 정세현 정국을 조정하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관과 권력하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관한 현상을 생각해 보자.

과연, 김 대통령은 민주를 수호할 의지를 가졌는가? 물론이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헌법을 따를 의사가 있는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헌법은 '의지'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총리의 함부로 전제를 해임하고 권력으로 막아버리면, 대통령의 주위에서 과연 누가 견제하려고 할까. 회의적인 생각뿐이다.

이러한 회의는 민주주의의 허물을 쓴 '세련된 독재'가 야기하는 생각을 한다. 역대 독재자들과 다른 점은 정권을

확고할 때만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있지, 정치 스타일은 다름이 없다. 주위에 손 들어주는 사람만 데려다 놓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제하고 만장일치라는 놀이를 하는 것이다.

또한 김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느낀다. 의교와 안보문제가 어떻게 고유 권한이 될까? 쉬운 말로 각각 풀이하면, '나라 드라내기'와 '나라 지키기'이다. 이것들은 바로 정제보다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국경선인이다. 어느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 개인이 처리하려고 총리를 지르거나, 한술도 안을 지르지 않는다.

이러한 파행적인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국민의 삼시세'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싶다.

먼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해야 한다. 총동원인 '김영삼 스타일'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개혁'을 '보수'와 '세련된 독재'로 보지 않도록 말이다.

둘째, 대통령의 발단과 헌법이 우선하는 민주주의를 단독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밥을 줄수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는 것인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경계선이 어디쯤인지 잘 모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공감언은 '졸준위'되어야

— 졸업앨범 제작 공방을 보고

지난 중간고사 기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련속 졸업준비위원회 사이의 졸업앨범 제작공방에 대한 공방은 그동안 졸업앨범 제작과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는가를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번 공방은 이번 학기 초 우리선생님 졸업앨범의 부가제 재학생이 대학 4년의 추억을 담은 졸업앨범의 질이 가격에 비해 낮다고 판단한 서울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가 졸업앨범 자체제작을 추진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학원비 배에 의하면 수련캠퍼스 사립학교출발위원회는 "올해는 수련캠퍼스가 만든 졸업앨범이 수련캠퍼스, 종전의 방식대로 하자"고 한 것으로 전한다. 그렇다면 그 종전의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5백만 원 이상의 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1억 원에 달하는 졸업앨범 제작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학교의 관례처럼 되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졸업준비위원회와 학생들에서는 대 내각과 연대로 입학선정 작업을 나뉘도록 해 왔고 대 내각을 고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졸업앨범 제작업체를 지난 4~5년간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왔다. 올해에도 역시 3개업체중 1개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맺을 계획이라 한다.

또한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의 균형

을 맞추기 위해 매년 번갈아가며 열면 제작을 담당해왔다.

이와같은 제작방식에 대해 우선 제1차 예산을 가지게 되는 생각은 제작업체의 선정에 관한 것이다. 94년도 졸업기념앨범의 제작가격은 1억2천여만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해마다 졸업기념앨범의 질이 나옴에도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으로 한 업체와 계속 계약을 했다는 것은 졸업앨범의 질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많은 예비졸업생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학교측이 공개경쟁을 요구하는 학생회가 그 산하의 졸업준비위원회의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학생들이 어떤 방법을 원하고 있는지, 또 어떤의 제작과정을 어떻게 되는데 대해 일반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정을 밝히며 하며 사정이 끝난 후에도 학생회 차원의 정화하고 공정한 간사 등을 통해 일반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면 왜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조건인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는 공고를 하나도 졸업사진 촬영일자를 알리는 공고만큼이나 더욱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것인데, 그러한 노력을 통해 졸업앨범의 '질'에 대한 시비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교과과정 개편안'을 점검한다

“필수과목 최소, 교과선택권 확대”

전공이수과목 평균 80학점에서 55학점 이하로 조정

이 성 호
(정명대학교 교수·회계학
기획위원회 사무국장)

교과과정의 체계화

그동안 학교에서 논의되어온 교과과정 개편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개편의 내용은 '필수과목과 전공이수 학점의 최소화'로 특징지워진다. 즉,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의 수가 대폭으로 줄었고 소속학과에서 제공되는 전공과목의 의무 이수학점 또한 크게 줄었다. 전공과목에서 필수와

소속학과에서 제공되는 전공과목의 학점을 36학점만 이수하여도 졸업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공과목 이수학점의 최소화가 곧 현재 개설되고 있는 전공과목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개설되고 있는 전공과목들은 여전히 개설되지만 단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크게 줄었다는 뜻이 된다. 즉,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이므로 이제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느냐 하는 문제는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었다.

‘학위’서 ‘과목’중심으로

이러한 개편의 기본취지는

최소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선택의 다양화가 곧 수강과목의 산만화와 비체계화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각 학과에서는 교과지도에 대한 내구화와 수강상담의 제도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학교 당국에서는 학점준화율과 강의평가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역작용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학생개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으로 개편되고 있다.

교과개편과 더불어 시간표의 편성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

폭넓은 지식, 적성 맞는 교과선택 가능 수강과목 산만, 학과특성 상실 우려도

선배의 배움은 각 학과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소속학과에서 제공되는 전공과목의 의무 이수학점은 대체적으로 55학점 미만으로 조정되었다. 이것은 현재의 평균 80학점 정도에 비하여 무려 25학점 정도가 감소된 것이므로 대폭적으로 감소된 것이다. 예를 들면 신학, 지리, 의상학과는 전공필수 학점이 각각 18, 22, 26학점으로 모두 30학점 미만(나머지는 전공선택)이며 화학, 경영, 무역, 회계학과는 소속학과의 전공필수 학점이 36학점 이하로 크게 축소되었다. 즉 화학, 경영, 무역, 회계학과 학생들은

상과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간표의 편성이 학과중심이었다. 즉, 각 학과에서 학년별로 조정되어 학과내의 필수과목은 시간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되었으나 이제는 전공과목의 개방화로 학과중심의 편성에서 과목중심의 편성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학생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필수과목의 연계를 제대로 이수할 수 있는 것은 대학원 수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필수과목의 배 학기 개설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즉 필수과목이 학생들에게는 수강선택이 매우 편리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전공과목은 그 개편의 주체가 학과단위이므로 학과내 자체 학과의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거의 무조건적으로 학과에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양과목은 전학과에 걸친 공통 과목으로 의사결정 과정과 학칙이 개입되어 확실한 윤곽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의 교양과목위원회에서는 논의된 내용과 전공과정에서 드러난 방향에 비추어 보아 교양과목 역시 필수와 최소화에 의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적용시기 및 시행방법

이러한 교과개편은 새학생들에게 어느만큼 영향을 있을 것인가. 교과과정은 기본적으로 입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학생에게는 해당

(전공 교과과정 학과(안) 개요)

학과	필수	선택	전공	합계
국문	36	12	48	
영문	36	15	54	
사회	27	36	57	
과학	33	21	54	
물리	42	15	57	
화학	33	33		
생물	39	15	54	
지구	22	21	43	
수학	33	24	57	
경제	27	24	51	
경영	33	33		
공대	36	36		
회계	36	36		
가정	32	21	53	
신학	32	18	50	
법	42	40	82	
평균	27	24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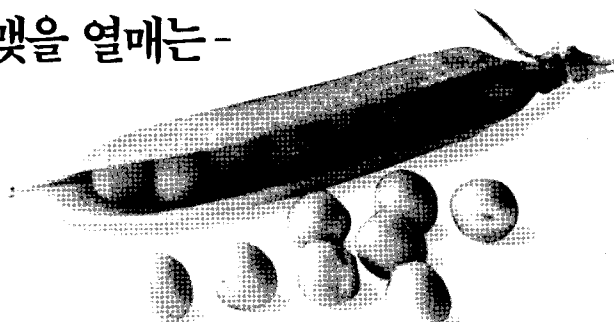
주: 1. 의, 약, 예체능 계열은 자료에서 제외하였음.
2. 대학교육협의회와 교과과정 평가방법은 학생 선택의 다양성, 복수전공, 부전공의 수용성과 타 학과 강좌의 수강의 용이성 등을 중시하고 있음.
3. 교과과정의 체계화-과목간의 연계관계, 제적제 반포하여 후-후속적 조치가 필요함. (의, 약, 예체능 계열 포함)
4. 대학원 교과과정의 체계화, 학과간 및 학부와의 연계성도 요청함.

단과대학의 특성과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많은 개편을 개설했던 것임과 함께 교과과정 개편의 시행도 모든 학과에게 일괄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강요하기 보다는 학과 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는 그 지원과 강화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개편의 내용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와 '학원자치위원회'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본과대학주부에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대학총학생회'가 기획한 사무국에서 학생 대표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으나 많은 학생들은 환영하는 뜻을 표하면서도 일부 학생은 '개편'에 대한 '공포'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POSCO메세지 면화

10년후, 내가 맺을 열매는-



“씨를 안 뿌려도 열매는 맺는다.”
열 사람에게 물으면 열 사람이 다 거짓말이라고 할 만.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말을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난 무엇이었이 되었겠고, 하겠겠고
타스러운 열매만을 생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끊임없는 진리 탐구로 싹이라는 씨앗들을 심을 때
미래의 꿈은 알차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씨도 아무 때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없고 맑은 날을 잡아 뿌리듯
인생에 있어 대학 4년의 시간은 가장 좋은 파종의 시간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4월,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을 정성껏 심어 보십시오.

제철국에서 동신국으로
포항제철